

윤석천의 '우리와 경제'



청년을 위한 나라

눈은 내리고 그렇게 한 해가 간다. 자연은 조용히 흐른다. 우리네 삶도 그와 같이 평안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 현실은 나날이 전경이다. 이쪽과 저쪽이 원수가 되어 싸우는 아귀다툼이 곧 세상의 일상이다. 충성이 없다고 평화롭다 할 수는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치열하다. 계층·세대 간 갈등이 심각하다. 나와 나는 의미로 흐르는 섬입 뿐이다. 소통은 사라지고 서로를 향한 무시와 적대만 가득하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왜 젊은이들은 '헬조선' '탈조선'을 외치는 걸까. 그만큼 현실이 절망스럽기 때문일 거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청년들의 '희망이 없다'란 말에 도저히 공감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살았던 힘들던 세상에 비해 지금은 호시절이라 생각한다. 세대 간 단절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어느새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청년들의 절망적 현실과 기성세대의 공감 부족 배후엔 의외로 '세대전쟁'을 조장·방치하는 정치권력이 있다. 보수 집권 세력은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게 정권 유

지 및 차기 정권 창출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믿는다. 결국 이들은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켜 내 편과 내 편을 명확히 가르려는 전략을 택한다. 진보 세력 역시 선거에서의 이익을 위해 이런 세대 간 갈등 유발 정책에 입을 다물고 있다.

청년층과 기성세대 중 어느 쪽을 잡아야 정권 장악에 유리할까. 한국은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는 게 힌트다. 당연히 하얀 기성세대다. 가장 최근 이뤄진 인구조사인 통계청의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1%를 차지했다. 20~29세 청년층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 정도로 파악됐다. 숫자라면 보면 청년층이 우세하다.

하지만 투표율을 보면 고령층이 청년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2012년 치러진 제19대 총선에서 60세 이상 유권자의 투표율은 약 69%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면 25~29세 청년층의 투표율은 38% 정도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고령층의 투표율이 청년층의 약 1.8배에 달했다. 노인들은 이미 청년들과 비

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정치권력이 누구의 손을 잡을지는 분명하다. 19대 국회에서 노인을 위한 법안이 청년을 위한 법안보다 약 4배 정도 많았다. 노인을 위한 복지 예산도 청년을 위한 일자리 예산의 5배에 달했다. 모두가 슈퍼파워인 노년층의 논치를 살린 덕이다. 이는 분명히 우리의 현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를 위한 정책은 전방위적이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각종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다양한 부동산 시장 부양책은 집을 보유하고 있는 기성세대에게만 가장 혜택이 있지만 아직 집을 갖지 못한 청년층에겐 불편한 정책들이다. 집값과 전세 값이 오름으로써 얻는 청년들은 이 땅을 지옥이라 말하고 기성세대는 그런 세대를 국가관이 없다고 비난한다.

마침내 청년들은 무언의 반격을 시작했다.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공격이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저출산이 더욱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노인들을 부양할 경제력은 물론이고 인구구조도 유지되기 어렵다. 기성세대가 자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청년들을 이용하고 정치권력은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이를 조정하는 한, 한국은 자칫 치명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청년들의 파업(저출산)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기에 한국의 복지 재원은 끝내 고갈될 것이 분명하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공멸이 불가피하다.

이제 세대 전쟁이 아니라 상생을 꿈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청년층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 노인 정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만큼 신경을 써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제나 성남시 청년배당제에 만족을 걸어야 아니다. 청년을 위한 나라로 가야 우리의 미래가 있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정치권력이 청년에 눈을 돌려야 하는 이유다. <경제평론가>

종교칼럼



김성원 광주중흥교회 목사

2015년, 세모(歲暮)에 부처

늙어 버리는 경우도 많고, 나이 든 사람이 나이에 걸맞지 않은 유지함을 드러내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 너무 나이 든 척하는 것은 패기가 없어 재미가 없고, 나이 든 사람이 제 나이값을 못하는 것은 주책맞아 싫다. 그래서 우리는 제 나이를 바로 계산하고, 그 나이에 걸맞게 처신해야 한다. 우리가 나이 계산하는 지혜를 얻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물론 요즘은 의술이 발달되고 환경이 좋아져서 100살 넘게 사는 분들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백오십 년, 이백 년을 사는 분들은 없다.

나이에 관한 일만이 아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다. 되는 일도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다. 많은 분들이 '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래서 옛날 관대에서는 '안 되면 되게 하라'고까지 가르쳤지만,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다 보니 무리가 있고, 부정이 있고, 안 되는 일이 더 많이 생겨지지 않았는가? 때문에 사람은 인생에 한계

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좀 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언젠가 한 신문기자가 천재적 코미디언이며 영화감독으로 유명한 우디 알렌에게 물었다. "당신의 작품 중 불멸의 명작이라고 생각되는 영화가 있습니까?" 그러자 우디 알렌은 그렇게 대답했다. "세상에 불멸이 어디 있는가? 나는 날마다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살고 있다." 인간은 한계성의 존재라는 사실이다. 그것이 이 세모에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이다. 그러가 하면, 나이를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나이의 때가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도 알게 된다. 여기에서 때는 기회이다. 그리고 그 기회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흔히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인생에 기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때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그 어느 때도 기회를 삼지 못한다. 우리는 오늘을 기회로 삼고 살아가되, 섬김과 화해의 기회, 선행의 기회, 배움과 진리 실천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 우리 인생의 날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교육자 협의회(NEA)의 기관지에 이와 같은 한 교사의 수기가 게재됐던 적이 있다. 그 교사는 자기가 담임했던 한 6학년 아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적고 있었다. "클리프 에반스는 특이한 소년이었다. 그는 다른 아이들과 섞여 놀지 않았다. 클럽에 가입한 일도 없다. 그는 말없이 교실에 들어와다가 말없이 나간다.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려 댈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대든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그 아이는 몹시 추웠던 어느 날 아침 학교 버스에서 내리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져 그대로 죽고 말았다. 클리프의 장례식에는 단 열 명의 학생 밖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그들까지도 잔구로서 참석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보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석한 아이들이었다. 나는 클리프의 관을 보면서 생각했다. 클리프의 비극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데 있지 않았나. 그의 비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데 있었다."

당신은 금년 한 해를 제대로 살았으며,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社說

지역 현안 가까스로 불씨 살리긴 했지만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등 지역 현안의 물꼬가 터졌다. 내년 예산에 자동차 100만대 기지조성(30억 원),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억 원) 사업비가 반영되고 전남의 중요 인프라 건설비는 증액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예산은 80억 원이 늘었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사업도 용역비로 15억 원을 확보해 첫걸음을 뒀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사업,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 송정~목포),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등 전남의 3대 기반시설 사업비를 늘리는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은 갈 길이 멀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토대이자 광주 미래 먹거리인 자동차 100만대 기지가 조성되려면 전제조건인 '광주형 일자리'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 근로자와 자동차 제조업체 보통 임금 수준의 70~80%인 연봉 3000만~4000만 원대 협약을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는 사

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애초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예산 일부도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해 불씨를 살렸다. 하지만 150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버겁기만 하다. 광주시는 '일일 행사'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5 유니버시아드의 경험을 살려 착실하게 대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더라도 물 건너갈 위기에 처했던 사업들이 이번 기회에 빛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이정현·김동철·장병만·박해자·권은희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광주·전남 관계자들과 함께 전력을 다한 결과라 하겠다. 여기에 주민의 성원까지 더해짐으로써 일단 최대 현안의 토대는 만들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들 현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구성원들이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문화전당에 거는 기대와 지역의 목소리

"전시 콘텐츠가 특정 예술 분야에 편중돼 지역 문화산업에 접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 예술계와 상생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도시 7대 문화지구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옛그재 광주 문화도시협의회와 광주민예총이 주최한 '문화전당과 문화도시 광주'의 미래'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이다. 이날 유현섭 문화전당 접근권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들을 위해 출입구에 자동문을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민인철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문화창조원의 전시들이 미디어 아트에 편중돼 실제 문화콘텐츠 산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박선정 광주대 겸임교수는 "(문화전당과)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강화하는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고 천두염 전남대 교수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인 문화전당 주변 7대 문화지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

진 계획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사실 이들 내용은 과거 지역사회에서 제기돼 요구해 온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는 콘텐츠에서부터 시설·운영·서비스 등 전 영역에 걸쳐 공식 개관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5년 착공 이후 거의 10년 동안 문화전당과 관련된 토론의 장이 수없이 마련됐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와 문화전당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지향하는 복합시설이지만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문화전당의 목표는 개관이 아니라 광주의 문화생태계를 개선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발전소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전당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참고해 향후 콘텐츠 제작과 운영에 반영하는 지혜를 보여 주길 바란다.

無等鼓

제 20대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락(當落)을 꼭 잡아서 알려 준다'는 점집들도 선거 분위기를 타고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모양이다. "아무게 후보가 용한 점집에 다녀 왔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부쩍 자주 들린다. '점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였던' 인사들도 점집을 출입한다는 소리가 들려와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점집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이번호 어디로 출마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출마하면 당선하겠느냐?" 등이다. 당연히 해야 하는 질문들이지만,

'바넘 효과'

특이한 것은 거의 모두가 "출마하면 당선된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의 핵심 중 가장 큰 이유는 대테러컨트론타워와 관련된 국정원의 권한 집중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 필요시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완책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과거의 정치적 불신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안통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선후경중'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 보다 더 큰일은 없다. 이제는 조용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테러 위험국가로부터 안전한 국가인가?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로서 지금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코 프랑스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다.

게 저렇게 해 나가면 잘 될 것"이라며 내놓는 '결정적' 조언들이 제3자가 듣기에 '그저 그런' 보편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점이다.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점을 치거나 운세를 보는 사람에게는 '바넘 효과'(Barnum Effect)가 작용한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성을 자신만의 성격이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인 경향'이 바로 바넘 효과인데, 당연히 '착각'이다. 점쟁이나 조언자가 "당신은 독립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 특이한 것은 거의 모두가 "출마하면 당선된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점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의 핵심 중 가장 큰 이유는 대테러컨트론타워와 관련된 국정원의 권한 집중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 필요시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완책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신문은 대체로 외향적이며 사회적이고 예의가 바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향적이고 말이 없으며 차갑기도 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라며 고개를 가우뚱할 사람은 없을 것 아니겠는가. '선거'라는 게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기에 귀신이라도 의지하려는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정답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잘 알고 있을 터다. 그동안 무수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면 자연히 답이 보일 것이다. /홍형기 정치부장 redplane@

기고

대한민국도 테러 안전 국가 아니다

기울이고 있다. 반면 국내적으로는 테러 예방을 위해 "치안과 안전은 근본적인 권리다"라는 대의명분하에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 테러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간략하게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1월 18세인 김모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IS 대원과 교감을 나눈 후 터키를 거쳐 시리아로 넘어가 IS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어 국내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11월 18일 프랑스 파리 테러 관련 국회 정보보위 현안 보고를 통해 "IS(이슬람국가)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우리 국민이 10명"이라며 "현재 이들의 신원을 추적,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에서 국제 테러조직 관련 활동을 하다 강제 추방된 건수가 최근 5년간 50여건에 이르고 있다.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사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거나 감시할 법률이 없다는 사실이다. 9·11 테러 후 미국 영국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관련법을 대폭 정비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였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테러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OECD 및 G20에 포함된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현재 4개국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중국조차도 국가대테러 정보센터 신설 등 반테러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대테러 대비책은 34년 전에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1982년에 제정된 대통령 훈령 제47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다. 갈수록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이 같은 지침 하나로 테러방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테러 예방활동의 본모습이다. 관련법 하나 없이 무방비 상태로 지켜보고만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군복무 시절 '47훈령장' 일대에서 많은 시간을 함께 하였던 탓에 이 모든 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훈령의 적용범위 또한 제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 기관에 적용"하는 것으로 국가기관 상호간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법치주의 행정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테러방지의 가장 본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테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활동이 필수적이며 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여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테러대응 및 예방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조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의 9·11 테러 후 테러방지법안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유사법안이 제출되었으나 매번 통과되지 못하였다.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의 핵심 중 가장 큰 이유는 대테러컨트론타워와 관련된 국정원의 권한 집중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과거 국정원의 정치적 개입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 필요시 국가 공권력 작용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완책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

이제라도 여야는 과거의 정치적 불신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법안통과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선후경중'이 있다.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 보다 더 큰일은 없다. 이제는 조용히 묻고 싶다. 대한민국은 테러 위험국가로부터 안전한 국가인가? 세계 유일의 휴전 국가로서 지금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결코 프랑스 테러가 남의 일이 아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독자서비스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